


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 |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| | 보 도 자 료 | | http://www.msip.go.kr http://www.customs.go.kr | |
| 보도일시 | | 2016. 7. 20.(수) 조간(온라인 7. 19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| 배포일시 | | 2016. 7. 19.(화) 08:00 | | 담당부서 |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관세청 통관기획과 | |
| 미래부 | 담당과장 | 나현준(061-338-4700) | | 담당자 | 배석희 연구관(4710) | |
| 관세청 | 담당과장 | 김윤식(042-481-7810) | | 담당자 | 조홍영 사무관(7841) | |

미래창조과학부-관세청, 전파법 관련 협업검사 가동 **- 정부 3.0 협업으로 전파 관련 불법·불량 수입물품 차단-**
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와 관세청(청장 천홍욱)은 전파 관련 불법·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 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¹⁾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,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·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,
- 이러한 불법·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애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,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

1) 적합성 평가 : 전파 혼·간섭 방지,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·판매·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

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,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.

□ 이에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·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.

○ 이러한 협업체계 구축이 불법·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,

○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·판매·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.

붙임 : 1. 적합성 평가 제도 개요 1부.

2.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 간 협업 추진 계획 1부. 끝.

참고1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

- (적합성평가) 전파 혼·간섭 방지,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·판매·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(전파법 제58조의2)



- (적합성평가의 유형) 위해정도에 따라 적합인증, 적합등록(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, 자기시험적합등록)으로 분류(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, 제3항)

| 유 형 | | 절 차 |
|------|-----------|---|
| 적합인증 | | •시험(지정시험기관) → 인증 신청(국립전파연구원) → 심사 → 인증서 교부 |
| 적합등록 | 지정시험 적합등록 | •시험(지정시험기관) → 온라인 등록(국립전파연구원) → 등록증 교부 ※ 등록 시 심사 절차 없음 |
| | 자기시험 적합등록 | •시험(시험기관 제한 없음) → 온라인 등록(국립전파연구원) → 등록증 교부 ※ 제조사 자체 시험 가능, 등록 시 심사 절차 없음 |

- (①적합인증) : “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”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증을 받음(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)
- (②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) :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(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)
- (③자기시험 적합등록) : 측정검사용, 산업·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·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(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단서,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)

□ 추진배경

- 국민생활 필수품인 전파관련 제품 등이 FTA 체결국 확대 및 전자상거래 발달로 외국으로부터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수입되는 사례 발생
- 국민의 인명안전과 전파 혼·간섭 방지 및 통신망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·불량 제품의 국내반입 사전차단 필요

【전파관련 제품(방송통신기자재등) 적합성평가(인증)현황 및 수입통관 추이】

(단위 : 건)

| 구분 | '13년 | | '14년 | | '15년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인증 | 수입 | 인증 | 수입 | 인증 | 수입* |
| 현 황 | 27,130 | 69,748 | 30,381 | 66,864 | 33,877 | 72,27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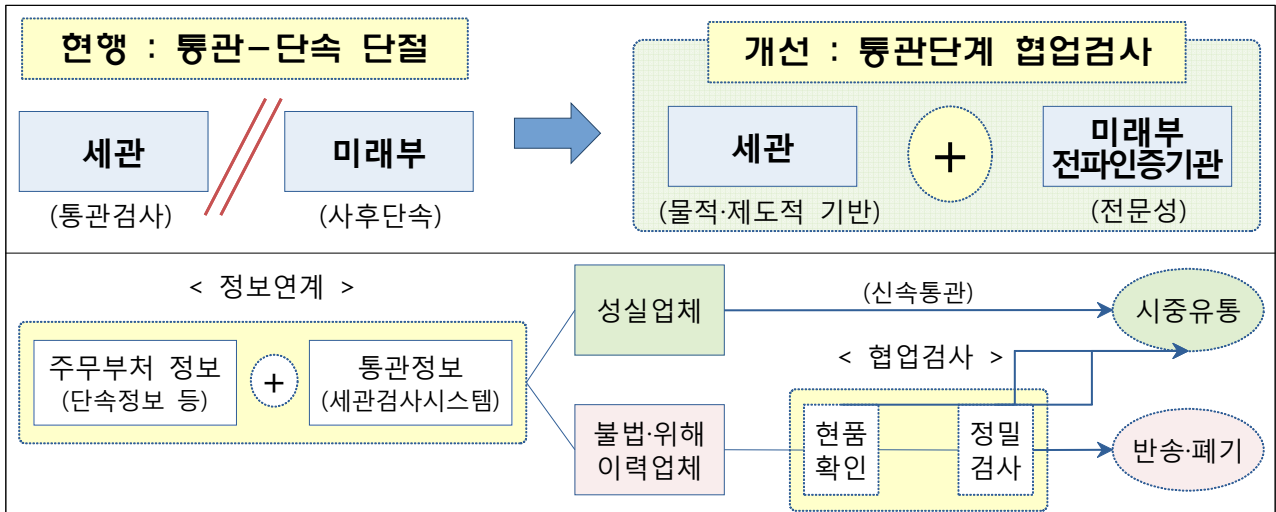
※ 2012년 전파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제분리 후, 전기용품 중 전기안전 인증만을 받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

□ 협업체계

- 검사권한을 가진 관세청 세관과 안전성 판단 전문성을 가진 미래부 인증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간 통관 단계 합동검사체계 구축
 - (제도)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조항 신설 (관세법 246조의3, '16.1) 및 전파관련 물품의 적합성평가와 위변조 금지(전파법 58조2와 58조10)
 - (체계) 관세청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및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

□ 협업계획

- (소비자 보호) 세관과 인증기관간의 업무단절을 악용한 인증서 위조 및 불량·유해물품을 통관 및 유통 前단계에서 차단
- (비정상의 정상화) 값싼 불법·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효과적 차단으로 정상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고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 보호



□ 시사점 및 기대효과

- **(협업검사 확대 및 행정효율화)** 시범서비스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미래부와 관세청 간 협업품목 검사를 확대 및 상례화
 - 양 기관간 정보공유 및 합동검사 추진으로 정부행정효율 향상
- **(국민안전 및 시장질서 확립)**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·불량제품 유통 방지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, 공정 경쟁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